

“소득 불평등... 경제 걸림돌”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 전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최영심 도의원 대표발의, 일명 ‘살찐 고양이법’ 추진 성과급 포함한 기관장 연봉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설정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일명 살찐 고양이법)'가 19일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열리는 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뜻한다. 국내에선 올해 5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공포됐다.

전북은 올해 7월 초,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연봉 상한선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심사가 보류되었고 지난 19일에서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제출된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다.

전북도의회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설립한 공기법인 전북개발공사와 군산의료원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연봉 제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1억4,669만 원이며,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해 1억2,565만 원을 넘지 못한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의료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해 진료실 직수당도 제외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아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다”라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는 더 잘라낼 허리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을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자는 게 목적인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주민 20여명이 암에 걸린 익산시 장점마을 해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장점마을 사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집단 암발병 사태 해결 촉구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주민 20여명이 암에 걸린 익산시 장점마을 해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을 비롯해 김정수(익산2) 의원, 최영심(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세종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아침 7시부터 “정부가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익산시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관련해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것.

김정수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에 도와 익산시 그리고, 국민의 건강·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에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인자로 규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인

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불법 유기질 비료를 만들던 공장 인근 장점마을에서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다. 결국, 환경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제2차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성 기자

文 대통령 “스쿨존 쉽게 식별할 방안 만들라... ‘민식이 법’ 조속 통과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 사고 기동차와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운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 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전날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를 골랐다.

박초희씨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을 막아 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랑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하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 버스가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기를 약속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은 이날로 청와대나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민식 군 아버지라고 밝힌 최초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뉴스1

전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 연구회(연구대표 문승우, 군산)는 2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대표 문승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의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사

업 발굴이 필요하며 정책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방응송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난 1년간 민간차원으로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김창현 울산시 남북교류협력

단장이 ‘농업분야 남북교류협력 사례 발표’란 주제로 울산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연구회 회원인 문승우(연구대표), 두세훈(연구책임), 국주영은 행정위원장, 박용근, 김이재, 홍성임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성기자

“국민 모두의 염원... 너무 늦게 이뤄져 죄송한 마음”

文 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대비, 배혁, 김종필, 이종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들은 지난날 31일 독도 소방구조 헬기 추락

사고 때 숨진 소방관과 구급대원, 이송환자들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면서 “소방관들의 진정어린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험기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윽고 “국민들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안전의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뉴스1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